

성명서

예술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정의하는 보조금법! 보조금법 개정 및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법 제정을 요구한다!

예술은 공공재이며, 예술가의 활동 역시 공공재의 하나이다.
'이구동성 팔길이 원칙'을 적용, 예술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행정은 더욱 가혹히 예술인들을 옥죄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채찍이자, 무소불위의 상위법인 보조금법!

사회가 세분화·고도화되는 가운데 AI를 이용한 기술의 발달은 예술인들의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을 매섭게 분별하고 색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예술계 저마다의 각기 다른 산업구조와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이대로의 보조금법이 유지된다면, 이는 그저 악법에 불과하기에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

예술은 인간이 하는 미적 창작 활동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수천, 수만 가지일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산구조도 매우 다양, 다각화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1인 1개월 최저 인건비도 안 되는 예산편성법은 예사이고, 총 지원금이 얼마든 인건비 30%를 넘길 수 없으며, 자부담금이 5~10%인 것은 물론, 선 예치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단체 구성 방식을 뒤로한 채 가족이 예술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 간의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예술인에게도 '보조금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의 실책은 뒤로 한 채 5년이 지난 지금 상위법인 보조금법을 적용해 환수 조치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됨에도 잠재적 범죄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사용항목을 제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 맞추고 또 맞추며 e나라도움과 같은 행정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앞세워 감시받아 왔다. 결국 이러한 제약방식은 전국 지자체에도 영향을 주어 예술창작지원의 본질은 뒤로한 채 점차 나누어 주기식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예술인에게 적용되는 이러한 경직된 보조금법 적용을 다시 살피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창작자들은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공 예산 사용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다.

무고한 예술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가들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기초예술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인식한다면, 이제라도 보조금법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한다.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은 예술 창작 전반을 위한 예산이어야 한다!

제조업 기준으로 편성된 칸막이식 예산 항목 체계를 해체하라!

예술가의 창작 환경에 맞지 않는 보조금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라!

2025년 7월 16일(수)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ASSITEJ Korea)